

# 국토부, 호남고속철 2014년 완공 확인

〈오송~광주 구간〉

## 정종환 장관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서 밝혀 “해저터널 통한 호남고속철 제주 연장 검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송~광주 구간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기를 2014년으로 밝혔다.

또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제주 연장 사업을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 완공시기를 묻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의 질문에 “2014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기에 대해 “무안국제공항 및 나주 경유 등의 문제로 완공 목표 연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공약과 조기 완공에 대한 의지 등을 거론하며 완공 시기를 2014년 이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했으나 정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이 같은 정 장관의 입장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오송~광주 구간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기를 2014년으로 확정(본보 2월 12일자 1면 보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의 완공 시기는 2014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물론 당초 계획인 오송~광주 2015년, 광주~목포 2017년 완공에 비해 1~2년 정도 앞당기게 됐지만 대선 공약보다는 2년 이상 늦어져 ‘반쪽 공

약’이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남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국토부가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막대한 예산과 공법,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송~광주~목포 구간의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예산 및 공법 등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배경에서 이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의지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14년 완공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특위에서 해저터널을 통한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구상에 대해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검토 과정에서 해저터널 검토 영역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구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해저터널을 통한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구상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지한다면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은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이 무산과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보안 차원에서라도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구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의 경제력이 경부와 호남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이 미뤄지면서 수십년 동안 구불구불한 선로로 남아있는 호남선의 장성~정읍 구간. <광주일보 자료사진>

## 도청별관 문제 등 현안 쌓였는데...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 ‘감투 싸움’에 표류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의원들간 ‘감투 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 손재홍 위원장 등 특위 위원 7명 전원이 이날 일괄 사퇴했다.

지난 2007년부터 활동해 온 문투위는 이날 본회의에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특위 전 위원 일괄 사퇴’를 골자로 한 ‘문화수도특위 활동기간 연

장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기존 특위 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특위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위원 구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자동 폐기됐고 연장 결의안은 원안 의결됐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수정안 제출은 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차치하려고 손 위원장의 사퇴를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위 활동 연장에 이어 위원장 연임이 가시화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 ‘감투 싸움’으로 비화했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문화수도특위는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빨라야 오는 3월17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롭게 특위가 구성될 경우 기존 특위가 활동해 왔던 업무 보고나 토론회, 현지조사, 시민단체·문공부와 관계 모색 등을 다시 추진해야 할 형편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

손재홍 의원은 “특위 활동기간 수정안이 마련된 것은 마치 기존 특위가 무언가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전연 사퇴하게 됐다”며 “도청별관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내달 임시회 때까지 특위가 표류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화수도특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회 차원의 감시와 대안제시를 위해 2007년 구성됐다. 2008년 2월 1년간 연장됐고 각 상임위 소속 2명, 의장 지명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한편 올해 첫 회기인 제176회 임시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 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다음 회기는 내달 17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활동 기간 연장 일부의원 반발

### 위원장 등 위원 7명 전원 사퇴

## 여수박람회 이주민 지원 확대

국회 특위 지원 개정안 의결

여수엑스포 개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주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 주승용, 김성근 의원이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서 규정된 정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일정 부분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주승용 의원의 수정개정안은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 ‘행사’ 직접시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지원시설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순천·광양 등 주변지역의 숙박시설까지 지원대상이 될 문제가 있다고 정부 측에서 제

동을 걸어 이번이 제외됐다.

수정개정안은 또 소득창출사업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다만,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를 신설, 박람회가 사업 지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박람회 지원시설 및 지원시설 구역의 확대를 기존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시설에만 해당되던 부담금 감면대상을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한 김성근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수시 관내도로 정비와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국고 지원토록 하는 규정은 정부 측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비록 일부 수정이 됐지만 이주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여수 충장·덕충지구 등 박람회 조성구역 안의 주민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미분양주택 펀드 투자 1억까지 비과세 당정, 퇴직소득자 세액 3%까지 공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고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책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빼고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정책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파악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발표일로

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중부세는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 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교복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

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항목에 교복 구입 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면서도 “외환위기 때는 이미 죽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법률적인 한계도 있어서 정부가 강도 높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국 무안공항 무안 직항!!!

가축의 때까지 상품과 치안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중국東方航空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 광주MBC 문화탐방 |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